

법령 제·개정 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6. (현행과 같음)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인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3호, 2026. 6.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7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인접한 시·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통제구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 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예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생 략)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철도 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철도 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6월은 AI와 자율주행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가 대중교통을 넘어 물류, 재난, 치안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된 한 달이었다. 완전 무인 차량의 실선 투입과 자율주행 법제화 등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K-스마트 교통 기술의 해외 진출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내 토픽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 국토교통부 슬로건 발표

국토교통부는 1일 핵심 정책 방향을 담은 새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를 발표했다. 공간(짓다)과 교통(잇다)을 직관적으로 연결한 이 슬로건은 미래 기술로 편리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교통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긴밀히 잇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를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삼아 모든 업무를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2026.6.1.)

공주시, 버스정보 시스템(BIS) 개선 시민 교통편의 강화

충남 공주시는 대중교통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버스정보센터시스템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스 정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서버를 이중화해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높인 방식이다. 아울러 영문 지원 누리집, QR코드 접속 지원, 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등 시민 체감형 편의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정보 부정확 민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코리아플러스, 2026.6.4.)

‘하늘엔 드론·땅엔 AI’...안양시, 첨단 기술로 여름철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 안양시는 여름철 기습 폭우와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무인 드론을 활용한 첨단 재난 안전망을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폭우 대비를 위해 AI 영상 분석과 자율 비행 드론으로 침수 위험을 조기 감지하며, 폭염 시에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심 서비스와 구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ITS)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안양시는 재난 감지부터 시민 보호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예측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투데이, 2026.6.7.)

강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화...시군 경계 넘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시·군별로 분산 운영되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으로 연계하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차로 통과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출동 시에도 연속적인 신호 제공이 가능해져, 사고 위험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6.6.10.)

카카오모빌리티, 강남 자율주행 데이터로 AI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 데이터와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을 연계한 데이터 플라이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 주정차,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발생 빈도는 낮지만 판단 난도가 높은 이른바 엇지 케이스 데이터가 중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남 실증을 통해 이런 도심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DNET, 2026.6.29.)

한국도로공사 제20대 유정훈 사장 취임...“신뢰의 길 위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정훈 제20대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국민 신뢰 재건과 미래플랫폼 기업 전환 등 4대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게소의 복합공간 전환, AI 모빌리티 융합 플랫폼 구축, 심야 자율주행 트럭 전용차로 시범사업 등 인프라 및 물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 전문가인 유 사장의 취임으로 향후 도로공사의 모빌리티 혁신과 신뢰 회복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2026.6.11.)

"도로 위 자율주행만 미래인가요"...진흙탕서 길 내는 HD현대 AI 기술

HD현대 건설 현장의 구인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자율 굴착기 및 긴급 자동 제동 기술(E-STOP)을 본격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 지형도와 굴착기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AI가 최적의 작업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며, 사람과 장애물을 정확히 구분해 장비를 자동 제어하는 방식이다. 스위스 현장 투입 결과 평균 생산성이 1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 현장에도 해당 스마트 굴착기를 공급해 무인화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2026.6.14.)

호출·길안내는 옛말... 모빌리티, '피지컬 AI·데이터'로 영토 확장

모빌리티 업계는 단순 이동 중개와 길 안내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공간·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는 각각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하드웨어 및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연합군 전략을 맺고, 자율주행과 무인 물류·배달 사업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지도 중심의 앱 개편과 '이동로그' 서비스 출시로 이동 정보 자산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그랩(Grab)의 사례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배달,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데이터 전문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2026.6.16.)

"앱 대신 114 누르세요"...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전화 호출' 각광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14 택시 대신불러주기'와 '택시 웹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앱 조작 없이 114 유선 전화나 병원 등 주요 거점 직원의 PC, 자녀의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 호출과 자동 결제를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이동 장벽을 해소하고, 향후 시니어 전용 시설과 복지관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데일리, 2026.6.15.)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의 번거로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활용 편의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국토 확산과 국토 위성 정보의 민간 유통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향후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026.6.16.)

에스트라픽, 美 건설협회 어워즈서 최우수상...차세대 지하철 출입구로 무임승차 50% '뚝'

에스트라픽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차세대 게이트로 미국 건설관리협회(CMAA) 어워드 인프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부정 승차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한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광역철도(BART)에 도입된 후 무임승차율은 50%, 범죄율은 1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뉴욕 등 북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6.17.)

에티포스, 글로벌 V2X 칩셋 톱10 기업 선정...2027년 양산 속도

에티포스는 인터스트리ARC의 '2026 V2X 칩셋 시장 보고서'에 퀄컴, 삼성 등과 함께 글로벌 10대 주요 기업으로 수록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기업 최초로 단독 프로파일이 실렸으며, LTE와 5G-V2X를 동시 지원하는 'ESAC' 칩셋과 미국 공공 인프라 진출 성과가 소개됐다. 에티포스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어 2027년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2028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신문, 2026.6.17.)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하기 위해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총 11개 부처가 협업한 이번 공모는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229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총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농·축·어업의 일손 부족 대응, 고위험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고령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시의성 높은 국민 체감형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전체 과제의 91.3%가 제품을 실제 도입할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시 후 현장 안착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참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 판로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끝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6.19.)

AI 순찰차부터 스마트헬멧까지...미래 치안의 실험실

경찰청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첨단 치안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변 위험 상황과 부상자, 무기 소지 여부 등을 스스로 감지하는 'AI 순찰차'와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수배 차량을 식별하는 '스마트 헬멧'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세한 조작 흔적을 분석해 딥보이스 및 딥페이크 영상을 정확히 판별해 내는 AI 기술도 사이버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은 검증 중인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조만간 실제 치안 현장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2026.6.21.)

노타, LG CNS와 맞손...AI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 사업화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노타는 LG CNS와 실시간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 CNS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역량과 노타의 비전언어모델(VLM) 기반 영상관계 솔루션 'NVA'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회를 공동 발굴하여 해외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및 AI 교통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인프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 체계 솔루션을 구현해 나갈 전망이다. (조선비즈, 2026.6.23.)

현대차가타 등 '부산모빌리티쇼' 총출동 전동화·AI 기술 '쇼케이스'

부산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전동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목적기반모빌리티(PBV) 관련 신기술을 선보이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를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벡스코와 부산 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의 아반떼 세계 최초 공개를 비롯해 기아의 PBV 특장 모델, 제네시스의 마그마 전력, BYD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등 국내외 브랜드의 신차가 대거 출품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기비행기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까지 전시 범위를 확장하여 완성차와 모빌리티 기업들의 첨단 기술 경쟁을 전면 배치할 전망이다. (글로벌경제신문, 2026.6.23.)

해외 토픽

BYD, 자율주행 사고 나면 모든 보상+운전자 보험료까지 책임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자사의 ADAS '갯스 아이' 이용 확대를 위해 도심 주행 보조 기능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직접 수리와 보상을 책임지는 신규 서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중국 내 2000만 원 이하 모델을 포함해 갯스 아이 A와 B 시스템에서 지원되며, 대인·대물 배상은 물론 이용자의 다음 해 보험료도 오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패키지에 사고 보상 정책을 포함시켜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실제 사용 비율을 높여 얻은 데이터를 AI 주행 모델 학습에 반영해 ADAS 고도화를 건인한다는 계획이다. (THE ELEC, 2026.5.31.)

역주행·신호무시·경찰추격전...‘미친 운전자’ 정체는 이 회사 AI였다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Waym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미국 11개 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의 맹점으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방 정부 기록과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호 무시, 역주행, 침수 도로 돌진 등 위험 주행 사례가 수백 건 이상 확인되었으며, 구조 활동 방해 및 오인 신고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리콜과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주행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웨이모 측은 중상을 유발하는 충돌 사고 확률이 낮으며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2026.6.4.)

CCTV에서 AI 관제로, UAE 지능형 교통체계의 확장

아랍에미리트(UAE)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ITS)을 확대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영상분석을 통해 교통 위반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하며, 가변정보표지판(VMS)과 차로제어표지(LCS)를 통합 운영해 상황 안내와 차로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도로 운영과 도시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스마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KOTRA, 2026.6.8.)

미 교통부,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형 서비스 지표 측정용 신규 대시보드 개발 계획 발표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교통청(FTA)은 미국 전역 대중교통 시스템의 이용자 체감형 지표를 측정하는 새로운 공개 대시보드를 개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시보드는 안전 및 보안, 청결도, 보편적 접근성,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 가용성, 시스템 신뢰성 등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FTA는 오는 2026년 8월 3일까지 해당 지표와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 정부 간 성공 사례를 상호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미국 가족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USDOT, 2026.6.8.)

"무인 트럭 41대가 실제 운송"...페시 미국서 첫 시도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펩시코(펩시)가 미국 내 주요 소비자 기업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무인 트럭 41대를 실전 물류에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가택이 일본 이스즈 모델을 토대로 설계·생산한 이 트럭은 카메라와 라이다 등으로 도로를 분석하며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야간 운행 제약과 기사 구인난을 해소해 물류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선제적 시도로, 정시 도착률 99%를 기록하며 실전 공급망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트럭 기사들의 고용 불안과 노조의 반발, 연방 규제 공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2026.6.9.)

2026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에도 교통위반 딱지 발부...법적 책임 시대 본격 개막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무인 주행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에 직접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딩 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교통 위반 책임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제조사나 운영사에 귀속시키고 당국과의 소통 수단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업들이 알고리즘 개선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이티인사이트, 2026.6.16.)

케냐 1,300억원 교통시스템 사업 본격화..."참여자격은 한국기업으로 제한"

케냐 도시도로청(KURA)은 수도 나이로비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 1,282억 원 규모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며 입찰 참여 자격을 한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이로비 간선 도로망에 스마트 신호등, 자동 차량 단속 시스템(VES), CCTV, 차량 감지 시스템, 가변 전광판(VMS)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케냐 정부는 교통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진행해 현장 경찰관의 수동 단속을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완화하고 도로 운영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기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KPI뉴스, 2026.6.17.)

중국 CIC 컨설팅 "도시 NOA 대규모 배포 진압...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가속"

CIC 컨설팅은 '자율주행 산업 백서'를 통해 중국 내 도시 NOA(Navigation on Autopilot)가 본격적인 대량 배포의 성장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로 중국 도시 NOA 침투율은 2025년 11%에서 2030년 62%까지 급증할 전망이며, 특히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방식이 높은 상업적 잠재력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배포로 축적된 실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로봇택시를 비롯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자율주행 산업 지형을 크게 재편할 전망이다.

(7ITSNEWS, 2026.6.18.)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6.30.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기술용역	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6,897,000,000	2026. 07. 15.
일반용역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7,100,000	2026. 07. 15.
일반용역	TS AI 공통플랫폼 고도화 및 민원·전세버스 공시 AI 구축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448,316,087	2026. 07. 20.
일반용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체인포털) AI 전환사업 감리용역	부산항만공사	374,000,000	2026. 07. 21.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긴급]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광주전남본부	312,000,000	2026. 07. 10.
용역	2026년 통합영상관리시스템 S/W 개발용역	본사	393,734,000	2026. 07. 13.
용역	[긴급]교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본사	487,514,800	2026. 07. 16.
용역	[긴급]RoADi(생성형 AI) 고도화 용역	본사	493,343,000	2026. 07. 16.
공사	영상보정 AI 시범운영시스템 구축	본사	447,149,000	2026. 07. 23.

R&D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사업규모	입찰마감일
R&D	2026년도 제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AI완전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 지원	158.5억원 (12개 과제)	2026. 07. 14.

2026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일반사항

사업명 : 2026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사업예산 : 6,8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 인구수는 -2.81%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7.13%증가 및 매년 3천만명 이상의 관광수요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하계 휴가철 및 행사 등의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의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함

또한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에 대한민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력과 미래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릉시만의 ITS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 이용자 체감형 ITS 서비스 확대, C-ITS와 협력하는 자율주행서비스 등 중소도시형 ITS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하고자 함

사업범위

공간적 범위 : 강릉시 관내(ITS 세계총회장 및 주요도로), 도시정보센터

내용적 범위 : 주차정보시스템, 번호인식카메라, 자가세정식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영상식 좌회전감응신호, 도형식 도로전광판, 자가통신망, SW 및 플랫폼 고도화 등

문의처

강릉시 ITS추진과(033-640-4520)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일반사항

사업명 :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사업예산 : 147,1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목적

(판교 단거리 통행 수요 해소 필요) 판교는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생활권으로 시간대·별·요일별 이동 수요가 급격히 변동함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판교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나 임직원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여 판교 내 근로자를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확인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도입 필요

과업 범위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운행시간 : 평일 08:00~19:00(주말,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등 미운행)

공간적 범위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노선
-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 벤처타운(서문) (16개 정류소, 총 11km)

내용적 범위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운영(운행) : 1대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배차관리, 차량유지관리, 인력관리(운전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 등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시설운영팀(031-888-9008)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일반사항

사 업 명 :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1. 30.까지
 사업예산 : 31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기술용역 적격심사(사전PQ))

과업의 목적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사업의 적기 준공 및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범위, 수행방법, 감리원의 임무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과업대상

과업의 범위 :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사업
 감리대상 사업 : 2026년 광주전남본부 CCTV 및 VMS 통합설치공사 등 13건
 ※ 감리대상 사업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감리내용

- | | |
|--|--|
|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4. 공사가 설계도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교통부(061-883-6152)

ITSK
NEWS

첨단기술로 도로 위 작업자 안전 지킨다... ITS 혁신기술 실증 현장 점검



「2025년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도로작업구간 능동형 사고저감 기술 실증 현장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방문했다. 현장 점검은 7월 2일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 안전체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ACC* 차량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로 작업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첨단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로 작업구간은 작업 차량과 장비, 작업자가 함께 위치하는 공간으로, 고속 주행 차량이 접근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1~’25)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는 220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49명에 이른다. 특히 ACC 관련 사고 30건 가운데 작업장 추돌사고가 21건,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일반사고 대비 치사율이 높아 작업구간 내 ACC 차량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ACC(Adaptive Cruise Control) :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보조장치



ACC는 선행 차량 추종에 최적화된 레이더 기반 시스템으로, 표지판, 육교, 갓길 시설물 등 정지 물체로 인한 오제동 방지를 위해 센서 반응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로작업 및 사고처리 등으로 정지 차량, 작업 장비, 작업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차량이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ACC 차량 감속 유도기술은 이러한 ACC 차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바이다에서 개발한 안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작업구간에 접근하는 ACC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고속 접근 차량 발생 시 작업자에게 진동과 소리로 위험 경고를 알리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은 시속 110km 주행 상황에서도 차량의 선제적 감속을 유도해 사고 발생 시 차사율을 최대 72%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차관은 이날 ACC 탑재 차량에 직접 시승해 'ACC 차량 자동 감속 유도장치'와 '작업자용 사물인터넷(IoT) 안전장치'를 체험하고, 기술의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도로 위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바이다에서는 향후 ACC 차량 자동 감속 유도장치 소형화와 범용성 확보, AI 기반 성능 고도화, 일반 운전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